

오늘부터 화물연대 총파업...광주·전남 물류 차질 우려

광주·전남 조합원 3500여 명 이상 '운송거부' 동참 추산
 긴급 출하에 원료·야적장 추가 확보...피해 최소화 대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광주·전남 조합원들도 24일 총파업에 대거 동참할 것으로 보여 물류 차질이 우려된

다. <관련기사 8면>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현재 조합원은 광주

1500여 명, 전남은 2800여 명에 이른다. 광주에서는 1000여 명 이상, 전남은 '총력 투쟁'을 선포하며 2500여 명이 물류 운송 거부에 동참할 것으로 점쳐진다.

의약품·코로나19 백신, 수출 물량 등 일부 긴급 운송 물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화물차가 멈춰설 것으로 화물연대는 전망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전면 폐지·확대를 줄곧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이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은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지난 6월 7일부터 8일간 벌인 총파업 이후 5

개월여 만에 다시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이다.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적용 품목·차종 확대 등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6월 총파업 철회 당시 합의 사항을 이행해달라는 것이다"며 "정부안처럼 3년 연장을 하면 그 때 가서 또 다시 갈등이 빚어질 것이 뻔하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제조·물류업체들은 6월 파업 당시처럼 주력 상품 출하와 해운·육상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준 여수·광양항 선적 부두 내 장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로 지난 한 달 평균 장치율 65%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졌다.

국토교통부 등 항만 당국은 수일 전부터 광주·운송사에 긴급 수출·입 물량 선적을 안내했다. 또 파업 여파 최소화를 위해 선적·환적량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석유화학제조업체들도 품목별로 물류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

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 화학산업 기업은 파업기간 중 긴급 배차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상품 조기 출하를 통해 야적·재고 물량을 최대한 비우고 있다.

다른 제조기업은 반도체 생산 원료가 되는 제조물량을 중심으로 조기 운송하거나 생산과 동시에 출하가 진행되는 액상 화학제품을 긴급 출하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 다른 입주기업들도 야적장 추가 임차, 원료 납품일정 조정 등 후속 대책에 힘쓰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파업 여파로 인한 생산·출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파업 당시 '고유책'으로 개별 도로 운송(로드 탁송)까지 했던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파업 기간 중 완제품 물량이 공장 내에 적체돼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차량 야적장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접근성이 좋고 드넓은 유희부지를 확보했거나 협의하고 있다.

정승호기자



연 날리며 월드컵 응원해요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 경기를 하루 앞둔 2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화성창룡문에서 한국연맹 회원들이 한국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원하며 연을 날리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함평군,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 '득일까? 독일까?'

시민단체 요구로 내일 첫 설명회
 여론조사 요구시 찬·반 수렴 계획
 반대 여론도 있어 유치 '가시밭길'

함평에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주민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주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군공항 유치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지역 민심이 두 쪽으로 갈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함평군은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23일 광주시와 함평군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 함평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군공항 이전사업이 국방부 평가 결과 이전이 타당하다고 결론난 지 6년 만의 첫 주민설명회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해양환경보호중앙회 함평군지부 등 11개 함평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면서 성사됐다.

설명회에서는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예비후보지 선정 절차 및 기준, 군공항 이전 시 파

급 효과와 최소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주민 지원 사업 내용도 함께 공유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다.

함평군은 주민 설명회 후 시민단체 등에서 주민 여론조사를 요구할 경우 군공항 유치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3만1000여 명인 함평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군공항 유치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 완공이 빨라야 10~1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함평군이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외면하기 어려운 처지다.

하지만 군공항 유치는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자칫 전북 부안군의 핵폐기장 갈등처럼 유치가 실패한 채 주민 찬·반으로 민심만 두 쪽으로 갈리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군공항 주변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이고

소음 피해를 입는 등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반대 여론은 불거지고 있다.

국방부가 2016년 8월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를 통해 무안과 해남을 후보지로 정하고, 작전성 평가 결과 고흥이 후보지에 포함된 것도 함평군 유치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함평에서 광주 군공항 유치를 위한 군불을 때고 결국 최종 이전 후보지에서 제외될 경우 민심만 분열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있어 주민 설명회를 지켜보는 입장이다"며 "군공항 유치가 지역발전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아무런 성과 없이 상처만 입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이전 군공항 건설 4조791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4508억원 등 모두 5조2480억원을 들여 종전부지(8.2㎢, 248만평)를 개발한 뒤 그 수익금으로 15.3㎢(463만평) 규모의 신공항을 짓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골자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함평=김광춘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